

# 목 차

## 규제혁신전략회의 보도참고자료

2023.8.24.(목)

1. [안건1] 산단 입지분야 킬러규제 혁파 ..... 1
2. [안건2] 화학물질관리 등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 11
3. [안건3]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분야 킬러규제 혁파 ... 19

# 산단 입지분야 킬러규제 혁파

1

## 첨단·신산업 업종 등의 기존 산단내 입주 확대 여건 조성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업부 입지총괄과	이영호 과장	044-203-4430
	신현우 사무관	044-203-4432

### □ 정책 현황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단 입주허용 업종을 규정
  -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산업의 경우 업종 구분이 불명확하여 산단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

### □ 추진 내용

- 신속·명확한 업종 판단이 가능하도록 업종판단 심의기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산집법 고시)
  - \* 화학, 생명과학, IT 등 신산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기구 구성

### □ 기대 효과

- 첨단·신산업 업종 등의 기존 산단내 입주 확대 여건 조성을 통해 기업의 신규 투자 신속 지원 가능

#### 【사례】 A社 열분해유 공장 업종판단으로 신규 투자

A社 페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은 페플라스틱·페비닐 등을 열분해해 나프타를 생산하는데, 신기술이 적용돼 업종분류가 불명확(C19 또는 C20)하여 B국가산단(C19 입주불가, C20 입주가능) 입주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업종을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C20)으로 유권해석함으로써 산단 입주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社は B국가산단 23만 8368㎡ 부지에 사업비 3,100억원을 투입하여 차세대 단열재인 에어로젤과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개별기업이 개발·사용하는 산단 내 첨단산업 입주 허용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업부 입지총괄과	이영호 과장	044-203-4430
	신현우 사무관	044-203-4432

### □ 정책 현황

- 개별기업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단(실수요산단)\*은 공장 설립 후 5년 이내 매매·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
- \* 국가산단 8개, 일반산단 165개, 도시첨단산단 4개, 농공단지 37개 등 총 214개
- 다만, 공동생산·R&D 등 협력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10%까지 임대가 가능하나 허용범위가 제한적

### □ 추진 내용

- 지역 첨단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첨단기술·녹색기술 기업 등\*은 실수요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임대 허용(산업법 시행령)
-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 생산, 원료공급 및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의 연구, 사용, 지원 등

### □ 기대 효과

- 실수요산단의 토지 활용도 제고 및 첨단산업 투자확대를 통해 광양포스코는 2033년까지 신산업 부분에 4.4조원 이상 투자 예상

#### 【사례】 A社 첨단전략산업 B국가산단에 입주

A社は○○산업을 위해 B국가산업단지를 직접 개발(실수요산단) 하는 중 이차전지 소재, 수소 생산 등 신성장산업으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공동생산·공동R&D 등 협력기업에게만 실수요산단의 임대를 허용하는 제한으로 인해 ○○산업 외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A社は 산단내 첨단 산업에 대한 임대허용을 통해 2033년까지 신성장산업 부분에 4.4조원 이상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3 산단내 연접부지 공장 증설을 위한 임대 허용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업부 입지총괄과	이영호 과장	044-203-4430
	신현우 사무관	044-203-4432

### □ 정책 현황

- 산단에는 불필요한 산업용지의 과보유 및 투기방지,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 기회보장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나대지)만의 임대를 제한\*
- \* 그간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제1항의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고 해석운영
- 나대지 임대 제한은 투기 방지 등의 순기능도 분명한 반면, 산업용지만의 임대가 필요한 실제 투자 등도 일부 제약

### □ 추진 내용

- 입주기업의 공장이 소재한 ①연접 산업용지에 ②제조시설 증설 등 투자계획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나대지 임대를 허용

### □ 기대 효과

- 산단내 연접부지 공장 증설을 위한 임대 허용을 통해 설비 투자 확대

#### 【사례】 A국가산단 연접부지 임대 허용

A국가산단 입주기업체인 B社は 석유화학단지 특성 상 추가 산업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임대를 검토하였으나 나대지 임대만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금번 입지분야 킬러규제 해소의 일환으로 산단내 연접부지에 대한 임대 허용을 통해 추가적인 설비 확대 등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4 기업자산 유동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재원 확보 지원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업부	이영호 과장	044-203-4430
입지총괄과	신현우 사무관	044-203-4432

### □ 정책 현황

- 산단 산업용지를 공장을 설립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가수요를 차단하고자 실수요자 외 민간금융투자자의 산업용지 소유를 금지
  - 매각후임대(Sale & Leaseback)와 같은 공장 소유권 이전 방식의 금융기법 활용이 제약\*되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제한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단내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처분하는 것은 허용

### □ 추진 내용

- 기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내 공장 등을 대상으로 민간금융투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산유동화 허용(산집법)
  - 자산유동화시 일정기간 임차기간 보장, 임차기업에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자산유동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
  - 토지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금융투자자로부터 환수하는 등 지가 상승 이익을 제한하여 가수요를 차단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 □ 기대 효과

-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짐으로써 기업은 설비투자비의 유동화를 통해 신규투자, R&D 등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

#### [사례] A국가산단 자산유동화 허용

A국가산단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그간 공장의 운영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높은 금리의 금융권 대출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간 적정한 매출로 공장운영에 특별히 지장하지 않았으나, 최근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권 대출금리가 점점 상승하고, 매출이 저하되는 등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금번 조치로 자산유동화가 허용됨에 따라 B씨는 공장을 재임차조건으로 매각하고 그 자금을 활용하여 공장운영비에 충당하고, R&D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 5 산업시설 편의시설 등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복합용지 확대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업부	이영호 과장	044-203-4430
입지총괄과	신현우 사무관	044-203-4432

### □ 정책 현황

- 복합용지\* 제도 도입('14년) 이전에 조성된 대부분의 산업단지에는 복합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없어, 편의·복지시설 확충에 한계
  - \* 산업시설(공장 등)과 지원시설(은행, 카페, 체육관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토지
- 복합용지가 없는 산단에 복합용지를 신설(예 : 0㎡→2만㎡)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여 시간·비용 부담 발생
  - \* 각 용도별(산업·지원·공공·녹지) 면적의 50% 이상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 필요

### □ 추진 내용

- 복합용지 신설 시 해당 면적을 산업·지원용지로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여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신설 및 공급을 확대(산입법)

#### 제도개선 효과 사례 (예시)

- ◆ 대구 달성2차일반산단('91년 착공)에서 산업시설구역 중 2만㎡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복합구역의 실제 토지사용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에 각 50%씩 사용할 예정임을 가정)

현 행		개 선	
구 분	면적 계산(천㎡)	구 분	면적 계산(천㎡)
산업시설구역	1,378 → 1,358(-20)	산업시설구역	1,378 → 1,368(-10)
지원시설구역	112 → 112	지원시설구역	112 → 122(+10)
공공시설구역	526 → 526	공공시설구역	526 → 526
녹지구역	257 → 257	녹지구역	257 → 257
복합구역	0 → 20(+20)	복합구역	0 → 0

• “복합구역” 용도가 50% 이상의 변경에 해당 → 개발계획 변경 필요

• 산업시설구역 0.7%, 지원시설구역 8.9% 변경 → 개발계획 변경 불필요

## □ 기대 효과

- 토지용도 변경(산업시설→복합용지)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낮아져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근로자 편의시설 공급 확대 가능

### 【사례】 ‘공장 인근에 커피숍·식당’, 복합용지 확대로 근로자도 사장님도 만족!

A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는 B씨는 커피를 사 마시려면 왕복 4km를 걸거나,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식당도 마찬가지로 산단 외부로 나가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단지는 용지별로 입주가능 시설이 제한되어 있고, 공장 위주로 토지가 활용되어 근로자의 작업장과 각종 편의·주거시설들이 입주한 지원 시설이 격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번 복합용지 도입 간소화 조치로 앞으로는 공장 인근에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합용지란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용지로 복합용지 도입 간소화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대거 도입되어, 청년 근로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6

##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토지용도변경 간소화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기용 과장 조남희 사무관	사무실 연락처 044-201-3675

## □ 정책 현황

- (개요)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
  - 다만, 준공된 산단은 토지이용계획 시설별 면적 10% & 3만㎡ 미만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개발계획 변경없이 조치 가능
- (문제점) 면적에 관계 없이 경미한 변경 기준을 국가산단(평균 1.6천만㎡)·일반산단(평균 80만㎡) 동일하게 3만㎡로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

## □ 추진 내용

-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 용도변경 가능한 면적 규모를 기존 3만㎡에서 330만㎡이상 대규모 산단은 최대 10만㎡로 확대

## □ 기대 효과

- 330만㎡이상 산단(57개) 중 42개 산단(74%)이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원용지를 10만㎡까지 추가확보 가능함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기대
  - 특히, 도심에 위치함에도 오래 전 조성되어 지원용지가 부족한 남동국가산단, 한국수출국가산단 등 산단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산단명	지정연도	면적	지원용지	경미한 변경 한도	
				현행	개선
남동산단	'80년	950만㎡	25만㎡	3만㎡	10만㎡
수출산단	'64년	371만㎡	27만㎡	3만㎡	10만㎡

## 7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선수립 허용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기용 과장	사무실 연락처
	오지민 사무관	044-201-3663

### □ 정책 현황

- (개요)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재생사업지구의 30% 이내에서 지정 가능
- (문제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만 활성화구역 신청이 가능하여 대상지가 매우 제한적\*이며 장기간 소요\*\*

\* 전체 노후산단(129곳) 중 재생사업지는 42곳(32.6%), 재생사업지구 지정된 곳은 24곳(18.6%)

\*\* 재생사업 선정 → 재생사업지구 지정 3.5~4년 소요, 활성화구역 선정 → 착공 2.5년 소요

### □ 추진 내용

- 재생사업지구 지정 전이라도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
- 다만 활성화구역 지정은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동시 또는 이후에 가능토록 하여 상위계획인 재생계획과 정합성 확보 예정

### □ 기대 효과

- 재생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산업단지의 경우 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대비 2배 이상(24 → 42곳) 대상지 확대
- 또한 재생사업계획과 함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 단축(6년→3.5~4년)

## 8 개별기업용 실수요산단 내 임대가능업종 확대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기용 과장	사무실 연락처
	조계환 사무관	044-201-3677

### □ 정책 현황

- (개요) 개별기업이 직접 개발·사용하는 실수요산단은 공장설립 후 5년간 토지·시설의 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예외적으로 공동 제품생산·연구개발을 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의 10%까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음
- (문제점) 산업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2차전지, 수소생산 등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 철강 등 기존 산업에 특화된 실수요산단의 경우 협력기업 범위에 신산업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 적기투자에 애로

### □ 추진 내용

-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탄소중립 전환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용지 임대 허용 대상에 첨단기술·녹색기술\* 기업을 추가
-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첨단기술,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

### □ 기대 효과

- 실수요산단 내 탄력적인 토지 활용을 제고하고, 급격한 산업여건 변화에 맞춰 기업이 신산업에 적기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례) 광양국가산단에 제철 산업 외 이차전지 등 사업 허용 → 4.4조 투자 계획
- 13개 실수요 국가산단 및 160여개 실수요 일반산단에서 임대 허용 대상이 확대되어 신산업으로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

# 환경분야 킬리규제 혁파

## 1 화학물질 관리 규제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안전과	(화평법) 마재정 과장 이주현 서기관	044-201-6770 044-201-6783
	(화관법) 정경화 과장 최재석 사무관	044-201-6831 044-201-6840

### □ 정책 현황

- 화학규제 대상 확대로 인해 규제비용 등 사회적 부담 지속 증가
    - 급·만성독성, 액체·고체 등 물질 특성과 관계없이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은 시설기준 등 화관법의 획일적 적용으로 산업계 부담
      - \* 고농도 황산(급성독성) 취급업체와 저농도 납(만성독성) 취급업체에 동일한 규제 적용
  -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 생산 및 구매 등 과도한 비용 발생
- ⇒ 유독물질을 특성에 따라 관리형태·수준 등을 차등화하고, 화학물질 정보 등록부담을 경감하여 규제이행력 강화로 사업장 안전공백 해소

### □ 추진 내용

- (구조개혁 <sup>법개정</sup>) 사고위험에 비례한 자율·차등적 관리체계로 개편(~'23.12)
  - (화평법) EU 수준(0.1t→1t)으로 등록기준 완화(1t이하 자율신고·관리)
  - (화관법) 취급량 적은 중소기업 중심 규제 합리화\* → 현장 이행력 강화
    - \* ①불필요한 시설기준 미적용, ②영업허가 면제(또는 신고제), ③정기검사 면제(또는 연장)
- (등록비용 분담 <sup>고시</sup>) 정부역할 확대로 기업의 등록비용 부담 개선(~'23.12)
  - (자료구매) 자료제출 면제를 위해 해외 공개자료 구매 시 과도한 비용 발생
    - \* 現) 요약서 제출(저작권 우려로 해외자료 구매) → 改) 출처만 명시
  - (자료생산) 중소기업 시험자료 생산 비용지원 확대(기존물질→신규물질 추가)



## □ 기대 효과

- (경제효과) '30년까지 1.6만개 이상의 기업에 3천억원 경제효과 유발
  - (등록기준 조정) 등록비용 절감 및 제품 조기출시 등에 따라 700여개 기업에서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
  - (자료구매 해소) 해외자료 미구매로 1.6만개 기업에 1천억원 비용절감
- (혁신사례)

###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A기업은 염료와 안료를 제조하는 업체로, 화평법에 따라 물질별 등록을 이행하고 있다. 물질당 7~9종의 시험자료 생산에 4~6개월의 시간과 1~3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물질개발 완료 후 시장 출시가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0.1톤에서 1톤으로 조정되면 A기업은 시험자료 생산 대신 신고만 이행하면 되어 시장출시 시점을 대폭 앞당길 수 있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B기업은 수산화나트륨 말통(20L) 2~3개를 사용하고 있다. 말통을 보관하는 장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되어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특성과 취급량에 따라서 관리기준을 차등화하게 되면 B기업과 같은 극소량 취급사업장은 정기검사 대신 자율안전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③】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영업자 허가신고 면제

C기업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표면처리제를 개발할 계획으로 소량의 시제품을 생산·판매해서 시장 반응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시제품에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조업)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등이 필요하여 새로운 시제품 생산에 적극적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면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의무가 면제되어 시제품 생산 등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 환경영향평가 규제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차은철 과장 이진희 사무관	044-201-7270 044-201-7271

## □ 정책 현황

- **확실적 기준에 따른 평가 대상 증가\***로 내실적인 검토에 한계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 접수 연 2~3천건, 환경오염 정도에 따른 집중 검토가 필요
  - 민간사업과 재정사업간 **불합리한 차별 규정** 등 **관행적 규제 상존**
- ⇒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편과 과감한 현장관행 혁파**를 통해 사업자의 평가부담은 완화하고, 지방·민간의 투자활력은 증진 필요

## □ 추진 내용

- (체계 개편) 절차 차등화·지방이양(평가 내실화), 재해대응 강화(~'23.12)
    - (절차 차등화)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간이평가) 평가협의 면제, 환경영향 큰 사업(중점평가)은 정부 컨설팅 강화로 원활한 평가 지원
    - (지방이양) 지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 이양(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지자체 조례에 따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재난대응 강화) 하천정비 등 긴급한 재난대응사업은 평가 면제
  - (관행 혁파) 과도한 보완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 신속 혁파(~'23.12)
    - (이의신청) 과도한 보완요구·협의내용(전략평가) 이의신청 절차 신설
    - (평가면제 확대) 환경영향이 미미한 파크골프장·농지개량사업, 전략평가(하천기본계획)를 거친 하천정비사업(준설) 등
    - (차별 개선) 민간투자사업에도 재정사업의 특례\* 적용 → 민간투자 촉진
- \* 하수도사업은 타 계획에서 전략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전략평가 생략 허용 등



## □ 기대 효과

- (평가 내실화) 지자체 조례평가 허용 및 간이평가 도입으로 평가건수가 10~20% 수준 감소\* 전망에 따라 평가 실효성 제고

\* 소규모평가 연평균 2,600건 중 지방이양(500건)+간이평가(100건)로 대체

- (재난대응 강화)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한 하천정비사업 등은 평가 면제\* 또는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난대응 지원

\* 긴급한 재난대응사업(행안부-환경부 협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한 사업 등

\*\* 하천기본계획 등 전략평가에서 약식평가로 전환하여 최대 3개월 단축 효과

- (혁신사례)

###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①】 재난대응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E지자체는 지난 '22년 9월 내습한 태풍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제방 유실 등 하천시설물이 파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조사 결과 하천시설물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면적이 하천구역에서 144,637㎡로 사업 시행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했다. E지자체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장마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재해복구사업을 빨리 추진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하였다. 긴급한 재난대응사업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조기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②】 민간투자사업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허용

F건설은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및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 관련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둘 다 시행하게 되어 있어 행정 중복 등 비효율의 문제로 투자·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정부재정사업의 경우처럼 입지 측면(부지, 관로 등)에 있어 환경적 영향을 관련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충분히 검토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G건설은 약 1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3

## 첨단산업 지원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마루 과장 김수현 사무관	044-201-6390 044-201-6395

## □ 정책 현황

-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 추진 중, 환경부도 반도체 특화 시설기준 마련('22.12) 등 전방위적 환경규제 혁신 노력
- 그러나 법 개정에 따른 시간 소요, 관행개선 미온 등 현장 체감도 부족  
⇒ 관행을 뛰어넘는 과감한 핀포인트(pin-point) 환경규제 혁신으로 용수공급 등 핵심 애로사항 해소 → 첨단산업 도약 지원

## □ 추진 내용

- (첨단업종 규제혁신) 첨단업종(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규제 신속 개선(~'23.12)
  - (시설기준)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 제정
    - \* 例> 국제적으로 안전성 인증된 설비 및 안전장치별 첨단장비 설비 인정 등
  - (배출기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불소 한계배출기준 합리화
  - (재이용기준) 산업공정 배출수의 기업간 재이용 허용, 최종 처리시설 공동 활용
- (첨단산업 지원) ①용수공급방안\* 선제 마련, ②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협의기간 단축, 보완요구 최소화), ③전담지원반 정책지원('23.6~, 사전컨설팅 등)
  - \* 例>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초순수는 화천댐 원수 공법, 기타 용수는 재이용수 활용 등

## □ 기대 효과

- (경제효과) 업계추산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으로 연 1.1조원, 불소 배출기준 합리화로 연 1천억원 이상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 기대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배출권거래제) 기후탄소정책실 기후경제과	전완 과장 김민지 사무관	044-201-6580 044-201-6590
(순환경제)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조현수 과장 박정현 사무관	044-207-7340 044-201-7345

#### □ 정책 현황

-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 외 거래 참여, 이월가능 물량 제한에 따라 **배출권 가격의 극심한 변동**으로 기업의 중장기적 탄소 감축 투자 곤란
  - 배터리 등 핵심자원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 기반 미비로 기업의 순환경제 이행 확산이 더딘 상황
- ⇒ 기업의 친환경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강화와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 촉진

#### □ 추진 내용

- (탄소중립 투자 촉진) 배출권 가격 예측가능성 제고 → 민간 기술투자 확대
  - (배출권시장) 이월제한 규정 완화 및 배출권시장 참여자 확대\*
    - \* 위탁거래 도입('23) → 금융기관 등 우선 참여('24~) → 개인 등 단계적 확대('25~)
  - (탄소중립 설비)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감축설비 지원대상 확대\*
    - \* 중소·중견(~'22년) → 유상할당 대기업('23년~) → 대상, 범위 지속 확대 추진
- (순환경제 가속화) 환경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폐자원의 순환이용 확대
  - (폐배터리) 회수시스템 구축,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 → 국가 자원안보 강화
  - (폐의류) 순환자원 인정을 통해 폐의류 재판매 등 신산업 육성 지원

#### □ 기대 효과

- (탄소중립 전환 촉진) 배출권 가격 안정화로 배출권시장 활성화 및 산업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확산
- (순환경제산업 발전) 순환경제 기술·시장의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와 신산업 육성으로 순환경제 성장동력 제고
- (혁신사례)

#####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①】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

J제철은 배출권 이월 제한('23년~'25년까지 순매도량의 1배 이내)의 영향으로 매년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에 배출권 이월 기준이 합리적으로 완화되면 배출권 가격이 안정되어 J제철의 온실가스 감축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②】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K기업은 해외에서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보관량 및 처리기한의 한계로 포기하였다. 하지만 보관 기준이 개선(30일→180일)됨에 따라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대량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핵심자원의 원료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분야 킬리규제 혁파

1

## 검증된 숙련인력 계속 고용 허용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태형 과장	02-2110-4070
	황민하 사무관	02-2110-4062

### □ 정책 현황

- '23년 6월 말 기준, 숙련기능인력(E-7-4) 수는 7,274명으로 전체 취업자격(E계열) 외국인(385,496명) 대비 1.9%에 불과
- 고용주가 기존 고용허가제 인력(E-9)을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숙련된 인력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불합리 발생

### □ 추진 내용

- (검증된 인력 계속 고용) 기업·지자체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여 검증된 외국인에 대해 숙련기능인력 신속 전환 및 장기체류 허용
  - ※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35,000명으로 확대
- (고용 연속성 유지) 전환 이후 현 근무처에서 2년간 근무 의무화

### □ 기대 효과

- 기업에 숙련기능인력 안정적 공급
- 대한민국 법질서를 따르면 “단순노무(E-9) ⇨ 숙련(E-7) ⇨ 거주(F-2) ⇨ 영주(F-5)”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민정책을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
- 외국인 근로자가 전환 후 사업장을 변경하는 등의 혼란 최소화

## 2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태형 과장	02-2110-4070
	황민하 사무관	02-2110-4062

### □ 정책 현황

- 학위과정 유학생 수('10년 7만명 → '22년 14만명) 12년만에 2배 증가
- '22년 유학생 졸업자 취업률 약 16%, 일반 국내 대학생 4분의 1 수준

### □ 추진 내용

-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인문계 졸업자 등에게 사무·전문직 외에도 숙련기능인력으로서의 전환 기회 부여
- (기업체 연수를 통한 취업 기회 부여) 해외 입국자에게만 허용하던 사설기관연수에 국내 유학생 참여 기회 부여
- (인구감소지역 취업 확대) 졸업 후 일정기간 거주하기로 한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 발급(28개 지역, '22. 10.부터 시범사업 시행)

### □ 기대 효과

- 산업계 취업통로 확대를 통해 유학생 취업 활성화 및 기업 인력난 해소

## 3 첨단분야 유학생을 R&D 인력으로 활용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태형 과장	02-2110-4070
	황민하 사무관	02-2110-4062

### □ 정책 현황

- 첨단분야 전문·숙련인력 수요는 증가함에 비해 해당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정주비율 저조

### □ 추진 내용

- (동반가족 취업비자 확대) 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이공계 유학생의 배우자 등에게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로운 취업 활동 허용
- (비자 신속 발급 등 정주여건 개선)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비자·교육·의료 등 개선과제 지속 발굴

### □ 기대 효과

- 첨단분야 우수인재를 국내 R&D 인력으로 확보·유지

## 참고자료

※ 기타 제공가능한 자료(관련 보도자료 및 이미지자료 등)



##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개혁 목표 안정적인 외국인력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

이었던 규제가 이렇게 바뀐다

정책대상

킬러규제

솔루션



숙련기능  
인력

제한된 쿼터,  
엄격한 전환요건

### 검증된 숙련인력 혁신적 확대

- ✓ E-7-4 쿼터 확대
- ✓ 기업과 지자체에 추천권 부여
- ✓ 일정기간 계속 근무 의무화
- 효과 > 기업에 숙련기능인력 안정적 공급



유학생

유학과 취업 분리,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 허용

###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 ✓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 ✓ 기업체 연수를 통한 취업기회 부여
- ✓ 인구감소지역 취업 확대
- 효과 > 산업계 취업통로 확대를 통해 유학생 취업 활성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 취업범위  
제한

###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 ✓ 동반가족 취업비자 확대
- ✓ 비자 신속 발급 등 정주여건 개선
- 효과 > 첨단분야 우수인재 국내 R&D 인력으로 확보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확대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제협력관	이상임 과장	044-202-7157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 서기관	044-202-7145

### □ 정책 현황

- 사업장별로 외국인력(E-9) 고용이 가능한 한도\*를 규정 → 최근 한도 상향\*\*('22.8)이 있었으나, 산업현장 수요에는 여전히 부족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조업 9~40명, 농축산업 4~25명 등 \*\* 업종별로 1~5명 상향

### ◆ 현행 E-9 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한도
1명 이상 10명 이하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11명 이상 50명 이하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이상 100명 이하	17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301명 이상	40명

※ ①비수도권 지역 소재, ②뿌리산업 등 인력부족 업종, ③50인 미만 사업장은 위 한도를 각각 20% 상향 (중복적용 시 총 60% 상향 가능)

### □ 추진 내용

-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은 원하는 만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한도를 획기적으로 상향 → 각 업종별로 2배 이상 확대

사업장별  
고용한도

현행

9 ~ 40명

2 ~ 10명

제조업

서비스업

개선

18 ~ 80명

4 ~ 20명

## □ 기대 효과

- 전체 쿼터 확대('22. 6.9만→'23. 11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장의 **인력 활용을 제약**하던 고용한도 개선으로 산업현장 **인력난 완화**

### 【사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황

폐기물 분류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폐기물 선별·분리 작업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최근 사업을 확장하면서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려고 알아보았더니 고용할 수 있는 한도를 소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되어, 필요한 외국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력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

## 외국인근로자 E-9 고용 허용 기업 및 업종 확대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임 과장	044-202-7157
	최재윤 팀장	044-202-7735
	이정석 사무관	044-202-7223

## □ 정책 현황

-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 **생산인구 감소**와 맞물려,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  
→ **외국인력(E-9) 고용**을 새롭게 **허용**해달라는 **현장 요구 지속**  
\* (現) 제조업(300인 미만), 건설업 농축산어업 일부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 등 9개) 상하차 직종
- '23년 **비전문외국인력(E-9) 도입 규모는 11만명**으로 '04년 고용허가제 최초 도입 후 가장 크나, **현장은 여전히 인력난 호소**  
\* 도입규모(천명): ('20) 56 → ('21) 52 → ('22) 69 → ('23) 110

## □ 추진 내용

- **[중견기업]** 인구감소 등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300인 이상)**에 **고용허가제 활용 확대**(~8월)  
\* 현행 E-9 제조업 허용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서비스업종]**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 및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력 고용 허용**(~8월)

## □ 기대 효과

-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는 **택배업** 및 **공항 지상조업**의 **인력난 완화** →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사례】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업종 확대

택배회사 D사는 택배업이 활성화 되어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택배 상하차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야간근로는 물론 체력소모가 심하고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내국인이 기피하여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일부 외국인근로자(방문취업동포)의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인력풀이 많지 않고, 방문취업동포의 경우 택배 상하차 업무보다는 업무강도가 낮은 식당 등 서비스업을 선호하여 구인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택배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인력풀이 확대되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 6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 확대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제협력관	이상임 과장	044-202-7157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 서기관	044-202-7145

### □ 정책 현황

- '23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11만명)\***이나 최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산업현장의 인력난 심화**

\* 도입규모(천명): ('20) 56 → ('21) 52 → ('22) 69 → ('23) 110

### □ 추진 내용

- '23년 E-9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고, 수요에 대응하여 '24년 쿼터도 **대폭 확대** 및 외국인력(E-9) **조기 도입** 추진

\* E-9 → E-7-4 전환(3만명)에 따른 E-9 추가 수요에 적극 대응

\*\* '23년 신규 쿼터 잔여분 3.2만명에 추가 쿼터 1만명을 더하여 총 4.2만명분의 4/4회차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추진



### □ 기대 효과

- 충분한 E-9 쿼터 **확대**로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



## 7 비상구 설치 기준 합리화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박원아 과장	044-202-8850
산업안전기준과	이은상 사무관	044-202-8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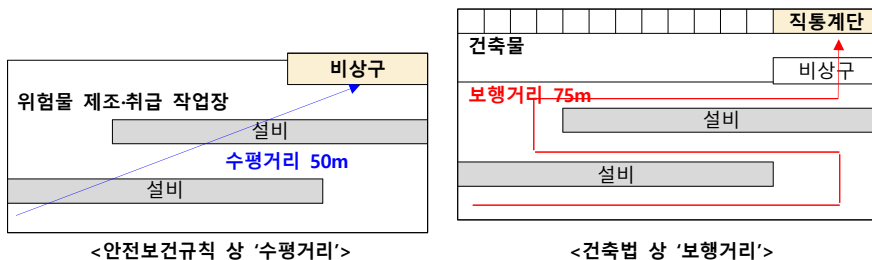
### □ 정책 현황

- 위험물질 제조·취급 작업장 및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안전보건규칙** (제17조)에 따른 비상구 설치가 필요하나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 설치기준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생

\* ①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 ②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 ③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 ④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

- 또한, 해당 기준이 **건축법령상 거리기준과 차이가 있어 공장 신설 시 설계·착공 단계에서 두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해 사업장 혼선 발생**

구분	안전보건규칙	건축법(직통계단)
수평거리 (보행거리)	수평거리 50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li> <li>·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 보행거리 50m 이하</li> <li>·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 보행거리 75m 이하</li> <li>· 무인화 공장 : 보행거리 100m 이하</li> </ul>



### □ 추진 내용

- 기존의 안전보건규칙의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을 원칙으로 유지하면서, 건축법령을 준수하면 안전보건규칙의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3호 개정

### □ 기대 효과

- 반도체 업계에서는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설비 배치**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청정도 유지\*\***를 통한 불량을 하락 등 기대

\* 반도체 제조건물 1개소당 설계비 등 총 2,850억원 절감

\*\* 1입방미터당 0.5 $\mu$ m 이상의 먼지 10개 이하로 관리

#### 【사례】 반도체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반도체업을 운영하는 A사는 최근 공장 신축공사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상 거리기준과 달라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준에 따라 공사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적 생산설비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비상구 설치’에 대한 부처간 법령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건축법령 준수 시 산안법령 상 비상구 설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시름 놓았다.

이렇게 되면 비상구 설치 및 설계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관부처(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박상원 과장	044-202-8935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승현 주무관	044-202-8940

## □ 정책 현황

- 현행 지침은 1994년 제정 후 주요 내용에 변화가 없으며, 화약류 취급, 운반, 관리 및 발파방법(도화선, 전기) 등을 규정
- ①도화선발파는 2000년대 이후 약 20년간 실제 현장에서 쓰이지 않아 생산 및 취급이 중단된 상황으로, 현실과 괴리
- ②전기발파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있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기술되어 있어 규정의 명확성·단어의 적정성 제고 필요
- 비교적 안전한\* 방법인 ③비전기발파, ④전자발파 기준은 부재
- \* (중국) '22.6월부터 일반 뇌관 생산 중단, 5년 이내 전자뇌관으로 완전 대체 추진 계획 (인도) 전기뇌관 사용 금지 및 5년 이내 전자뇌관 사용 의무화 추진 중

## □ 추진 내용

- (기본방향)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장 적합성 고려, 총포화약법\*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전부개정 추진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12.22, 경찰청 소관)
- (현행화)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 삭제
- 비교적 안전한 발파방법인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사용에 관한 안전기준을 담은 규정 신설
- (정비) 세부 안전기준이 필요한 “전기발파”, “화약류 취급·관리” 등은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개선하여 수용력 제고
- (관계법령) 총포화약법 등 법률상의 기준\*을 반영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규정(現. 화공작업소 등)은 삭제하는 등 정합성 제고
- \* ① 출처가 불분명한 ‘화공작업소’ 삭제, ② ‘화약류취급소’ 현행화, ③ 발파작업과 무관하게 화약류 제조·판매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는 관계 법령 준용 등

< 폭약을 기폭하는 방법에 따른 발파방법 구분 >

① 도화선발파	② 전기발파	③ 비전기발파	④ 전자발파
			
심지에 불을 붙여 타들어가는 불꽃으로 점화되는 채래식 발파방법	뇌관에 연결된 전선에 전류(electric)를 보내 발생시킨 열로 기폭	전기의 사용 없이 내부에 화약이 코팅된 튜브를 따라 불꽃으로 점화	전자(electronic) 신호를 원격으로 통신하여 작동 시킨 제어장치가 기폭
규제 삭제	규정 유지	규정 신설	규정 신설

## □ 기대 효과

- 전자 발파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으로 폭발재해 감소

### 【사례】 발파 안전기준 정비

산업용 화약류를 생산·보급하고 있는 B사는 화약류를 제조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파작업을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발파작업 시에 사용되는 화약류에 의한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기준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전기발파·전자발파에 대한 규정이 없고, 수십년전에 사용되었던 도화선발파에 대한 규정만 있어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최근 이러한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한다. 규정 정비로 발파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고, 화약류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